

고3 시험지 유출은 구조적 비리

대학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의 기말·중간고사 시험지 유출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학벌·성적지상주의와 입시제도의 폐해가 그대로 반영됐다는 지적이다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 공공성 확대, 시험출제·평가 관리 보완과 교사·자녀 상피제 제도화, 학교운영위원회 지정 등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7일 광주교육청 등에 따르면 사립학교인 광주 모 고교에서 행정실장 A(58)씨가 학교운영위원장인 학부모 B(52·여)씨에게 올해 1학기 중간고사에 이어 기말고사에서 도 이와 9개 전 과목 시험지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학교에서 행정실장이 차지하는 영향력을 감안하면 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보다는 구조적인 비리로 보는 시각이 많다.

사립학교 행정실장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의중을 가장 깊게 파악하고 이행하는 직위로 학교운영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행정실장이 학교운영위원장과 공모해 장기간에 걸쳐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광주지역 학생·학부모는 물론 일반 시민들이 받은 충격은 그동안 발생했던 학사비리 중 역대급이다.

부부의사인 B씨의 비뚤어진 자식 사랑도 시사점이 있다. 학벌주의에 따른 성적지상주의가 만연한 세대에 자식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부모는 물론 자식까지 파국으로 치닫게 했기 때문이다.

광주지역 156개 중·고등학교 중 사립학교 법인은 67개로 사학 점유율이 43%에 달해 44%인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높다. 고등학교만 놓고 보면 전체 고교 67곳 중 사립이 42곳으로 63%에 달한다.

하지만 사립학교법인들이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16년 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정 전입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11.3%, 중학교 6.9%, 고등학교 16.9%로 평균 14.3%에 그쳤다. 연도별 납부율은 2013년 18.15%, 2014년 17.37%, 2015년 16.0%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법정전입금은 사학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 의료보험 비용으로 내야하는 돈이지만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고 있다.

사학법인들은 광주교육청이 공공성 확대 차원에서 교사 위탁제도를 제안하고 있지만 인사권 침해라며 이미지도 거부하고 있다.

사학법인들이 제왕적 권한을 누

학벌·성적지상주의 등 현행 입시제도 폐해 담겨 사립 공공성·시험관리·상피제·학운위 지정 강화

리면서 교사 채용비리와 교비 횡령, 성적조작 시험지 유출 등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교육청 학업성적 관리 매뉴얼은 일선 학교에서 시험을 치를 때 담당 교사가 출제된 문제를 교감·교장이 결제를 한 뒤 인쇄실에 보관하고 인쇄 후에는 포장·봉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쇄실은 통제구역으로 관리하고 행정실장과 학교장이 보안책임을 맡는다.

하지만 시험문제가 유출된 학교는 포장·봉인 등 보안 매뉴얼을 전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광주지역 다른 사립학교에서도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점이다. 행정실장이나 인쇄실 직원 등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시험지를 유출할 수 있다.

광주교육청은 그동안 사립학교의 시험 관리를 통제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지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선 고등학교의 학사 관리에도 학부모들의 불신이 깊다.

대표적으로 교사와 자녀가 한 학교에 배치된 사례다. 동료 교사 자녀의 생활기록부와 내신에 신경쓰지 않을 교사가 어디있겠느냐는 것이 일선 교사들의 목소리다.

일반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교사 자녀와 경쟁해야 하는 것 자체가 출발선이 다르다보니 내신과 생활기록부 관리가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교육계 내에서도 수년 전부터 중·고등학교의 경우 교사와 자녀를 분리 배치하는 상피제(相躋制)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으나 인권침해 문제로 미뤄지고 있다.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구성하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학교장과 교사, 지역 인사, 학부모들이 참여한다.

운영위원장은 위원 중 학교 측을

제외한 뒤 호선하고 있으나 대부분 학부모가 맡고 있다.

운영위원과 운영위원장 모두 경제적 여력이 뒷받침되는 사람들로 변호사, 의사, 교수, 고위 공무원, 기업가 등 지역 오피니언리더 가족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위원장은 학교 운영 전반에 관여할 수 있다보니 학교 측 관계자들과 자연스레 친분을 쌓을 수 있다. 일부 운영위원장은 친부도모를 명분으로 학교장, 행정실장 등 학교 관계자들과 식사와 골프 등 사적인 모임을 갖고 있다.

문제는 운영위원으로 참여한 동기가 자녀에 대한 관심이 목적이 분명하다보니 학교 측 관계자들이 해당 자녀를 특별 관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일반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위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좁지 않은 이유다.

이번에 시험문제가 유출된 고등학교에서 영향력이 큰 행정실장과 학교운영위원장 간에 범행공모가 이뤄진 것도 학교운영위원회의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조인호 기자

준공승인 과정 돈 요구 정황 공무원 수사

전남 한 자치단체 공무원이 아파트 준공 승인 과정에 돈을 요구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나주시청 한 부서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 해당 부서 간부 공무원 등을 상대로 조사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나주 지역 내 아파트 준공 승인과 관련, 공무원이 특정 건설업체 직원에게 돈을 요구한 정황이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이 과정에 브로커가 개입했는지, 또다른 혐의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신봉우 기자

해수욕장서 '수영복 여성 몰카' 40대 입건

인천 강화경찰서는 17일 해수욕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영복 입은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회사원 A(44)씨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40분께 인천 강화군 동막해수욕장 해변에서 수영복 입은 피서객 B(36·여)씨 등 여성 2명의 신체를 휴대전화를 이용해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일행들과 해수욕장에 놀러오다가 소리가 나지 않은 무음 앱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기에서 수영복 입은 여성 사진 수십장과 동영상 발견했다.

폭염으로 80대 노인 사망... 주의 요구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전북지역에서도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남원지역에 거주하는 80대 남성이 온열질환으로 숨졌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은 올해 도내에서는 처음이다.

80대 남성은 전날인 16일 오전 10시께 집을 나섰다. 그러나 1시간 가량이 지난 뒤 길 위에 쓰러진 채 발견됐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체온이 39도 이상 상승해 있었고 증상이 열사병으로 추정 돼 주주의가 온열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원의 경우 낮 최고기온이 34.8도를 기록하는 등 폭염경보가 발효돼 있는 상태다.

도 관계자는 "폭염 등 더위가 이어질때는 야외활동을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며 "평소보다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장시간 야외활동이나 작업은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동서 말벌에 쏘인 60대 사망

16일 오후 5시 30분께 경북 안동시 서후면 주민 A(61)씨가 말벌에 쏘여 숨졌다.

안동소방서에 따르면 말벌에 쏘였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서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다.

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과 수액 처치 등을 실시하며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

출소하자마자 19차례 절도 20대 구속

출소 후 차량과 식당에서 금품을 훔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A(22)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25일부터 이달 7일까지 대구와 경북 안동 일대를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과 영업을 끝난 상가에 침입해 19차례 걸쳐 금품(시가 11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종전과로 올해 2월 출소하자마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절도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지난 3일 대구 북구의 한 피시방에서 A씨를 검거했다.



불법촬영 근절 그네광고판 부산경찰청은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아 해운대수목장에 불법촬영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담은 '불법촬영 근절 이색 그네 광고판'을 설치했다고 17일 밝혔다.

폭염속 여수서 90명탄 여객선 일시 표류

발전기 고장...출항지 회항

폭염경보가 내려진 17일 오전 전남 여수 해상에서 90명을 태운 60t 여객선이 항해 중 표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창훈)는 17일 오전 8시 20분께 여수시 남면 금오도 북서쪽 900m 앞 해상에서 여객선 H 호(67t·승선원 90명)가

발전기 고장으로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 등을 출동시켰다고 밝혔다.

H 호는 비상 발전기를 가동해 표류 중 엔진을 정상화한 뒤 오전 8시 34분께 여수시 남면 여천항에 입항해 승객 86명을 내리게 했다. 이어 고장 난 발전기 수리를 위해 울산해경파출소 구조정의 근접 호송 속에 출항자인 불산신기항에 입항

했다. 앞서 해경은 전남 오후 12시 23분께 여수시 남면 금오도에 거주하는 윤 모(38·여) 씨가 자택에서 어지럼증과 혼수상태 증상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을 보내 화태도 월진 항에 대기 중인 119구급차량에 인계했다. 윤 씨는 여수의 한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며 생명의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수=송기홍 기자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 농지매입비축사업
- 농지임대수확사업
- 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농지연금사업
- 농지규모화사업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농어민들이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지은행은 영농개시에서 은퇴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20~39세 창업후계농에게 5~10년 장기임대차, 장기저리(0.9%, 1~2년 농지매입자금 용자 지원)

농지임대수확사업

자급 어려운 농지소유자 농지의 임대를 위탁받아 전문농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

농지연금사업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농지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 지급

농지매입비축사업

고령은퇴·이농 농업인 농지 매입비축을 통해 농지시장 안정 도모

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자연재해·부채 등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보장, 경영 정상화 지원

농지규모화사업

농지매입 임대차 교환분할을 통한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 지원